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출시 유전자 변이 가능성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지난 2월말부터 일부 국내 백신회사를 시작으로 출시가 되어 농가에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백신회사들도 곧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이면서 그동안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양계인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낮은 폐사율과 산란율, 사료섭취량 감소 현상을 보이며, 전파가 늦고 백신접종으로 방어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996년 3월 화성 등 3개지역, 5개 농장에서 첫 발생을 하였다. 당시 발생농장에서는 산란저하는 물론 다양한 폐사형태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켰고 정부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초 강수로 대응 하였다. 하지만 이후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고 2002년에는 전체 산란계 농장의 절반이 감염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이 질병이 처음 발견된 이후부터 본회를 비롯한 농가에서는 백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난 2004년 6월 백신개발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2003년부터 일부 백신회사에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백신을 허용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해 2006년 7월에 국내 H9N2를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였고, 같은 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역시 백신개발에 성공하면서 야외시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성에서 완벽하다는 판단하에 금년부터 농장 공급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육계를 제외한 산란계, 종계(육용, 산란)농장은 필요할 경우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백신회사에 의하면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 3주전까지 1번 접종하고 산란전까지 1번으로 총 2번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농장여건에 따라 중추시기에 한번 접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역가가 낮아질 경우 실시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는 유전자형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3개 대학

에 용역을 주어 백신을 사용하는 농장에 감시계를 두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변이 가능성에 대해 검사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백신 판매회사들도 농장에 감시계를 두도록 하여 자체 검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도 모니터링 검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식에 그친 모니터링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위험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백신의 효과적인 관리와 관찰을 통해 국내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종식을 기대해 본다.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 출범키로 백세미 문제 해결에도 큰 기대

종계·부화업계와 토종닭 업계가 질병전파 등 양계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종계·부화장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계·부화인들은 지난 14일 본회에서 가진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닭질병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종닭협회와 협조체제하에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축산법 제20조에 의하면 부화·종축업을 영위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종계·부화인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불법적 행태의 종계·부화업을 자행하고 있어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종계부화인은 물론, 실용계 농가에게까지 피해를 전가시키는 병폐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토종닭협회는 행정요원과 함께 경기도의 모 토종닭 농장의 부화실적을 확인한 결과 불법적으로 토종닭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농장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가 취하는 등 이미 불법 종계·부화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무등록 종계·부화장은 물론 불법 종계·부화장에 대한 고발의 문이 열려있었지만 거의 고발건수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센터가 운영될 경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백세미에 대한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 및 씨알의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을 하여 종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만이 정상적인 종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는 관계로 종계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금티푸스 백신이 무방책으로 사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다.

종계·부화인들은 종계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종계부화장 관리요령에 준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철저히 적발하여 계도 및 고발키로 하는 등 불법 종계장과 부화장의 척결

을 통해 고질적인 양계업계의 병폐를 뿌리뽑고 자정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본 센터의 설치운영을 계기로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무등록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종란과 병아리, 불법 토종닭 생산 및 사육, 백세미 씨알 생산계군을 근절하는데 큰 몫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생산비 상승 등 문제점 도출

금년부터 1일 도축수가 8만수인 도계·도압장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확대와 더불어 포장을 위한 도계공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유통은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수입 닭고기를 최소화시키는데도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을 지켜보며 용기 표시사항 정비를 비롯해 가공식품의 경우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영양성분표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포장유통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8만수 이상, 내년부터는 8만수 미만의 모든 작업장이 포장유통을 의무화해야 하는 실정에 놓인 것이다.

일부 대단위 도계장들은 이미 포장유통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어려움이 없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육계계열업체들은 첨단 포장설비를 도입하면 수십억씩의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가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가설비에 따른 위생관리가 소홀해 질 경우 오히려 위생관련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8만수 이상을 도계하는 대상은 H사를 포함한 5개사이지만 내년에는 8만수 미만의 도계·도압장도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중에는 닭고기 전량에 대해 심부온도를 2°C 이하로 낮춰 밀봉, 포장을 한 뒤 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도계장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계장에서 정부 규정대로 따를 경우 대대적인 정비 없이는 전면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포장유통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시행업체에서는 이를 따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포장유통의 성공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